

첨단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산업부, 제113회 외국인투자자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등 의결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기존 50년 한도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05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 3배 확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채택
韓·美 등 포함, 22개국 동참 약속
산업부, 원전 파트너 경쟁력 강조

우리나라와 미국 등 22개국이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데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2차관은 지지 연설을 통해 원전 파트너로



고리원전 3호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 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社 모집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3일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4일~21일이다.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과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한다.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엔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가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

자우편·우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 선정 시 우대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기술을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가맹본부,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협의 필요”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할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

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감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美 실리콘밸리에 ‘녹색기술’ 소개

韓-美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정부가 3일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라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 개선 등을 겨냥해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상세 내용은 투자자 및 구매처(바이어) 대상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www.K-Greend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아세아(환경배관 이름 설비)와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썸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등이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케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청한 영어 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해 이번 참가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경부, 車 배출가스·공회전 등 집중단속

전국 17개 주요 시·도 650여 지점 대상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3일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650여 지점이 대상이다. 오늘부터 내년 3월22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추진된다”며 “조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연세 기자